

뉴햄프셔 등은 담배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한 결과 흡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 2. 캐나다

### 가. 연방법률

캐나다 연방정부는 1989년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Tobacco Products Control Act를 제정함으로써 담배규제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후 캐나다 연방정부 담배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1997년에 제정된 The Tobacco Act다. The Tobacco Act의 제정 목적은 첫째,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을 흡연으로의 유인과 중독으로부터 막고자함이며 둘째, 담배로의 접근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셋째,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함을 국민에게 널리 인식시키고자 함이다.

동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제품을 생산기준에 맞추어 제조하여야 하며 담배와 담배연기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담배제품을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소매상은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법에 위촉된다는 사실과 건강관련 문구를 공공에게 알리는 표시를 내걸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매상은 담배제품을 진열상태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담배와 담배연기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과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담배제품을 팔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에서 담배의 포장개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단위가 적용되지 않는 담배제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의 포장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문구 및 담배의 방출물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판매할 수 없다. 경고 문구는 영어와 불어 두 개의 공식 언어로 쓰여야 하며, 명확하게 표기되고 읽기 쉬워야 한다. 주요표기 면에 경고문구가 적어도 50%이상 차지해야 하며, 경고문구의 글씨는 검은색 Helvetica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고 문구를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각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사업자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인가가 되지 않은 이상 담배제품을 광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담배제품을 상기시키거나, 브랜드명, 포장, 담배 등의 부분이나 전체를 묘사하는 목적의 광고는 홍보할 수 없다. 또한 시설에서도 스포츠나 문화이벤트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거나 담배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시설의 이름이나 시설이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명, 담배제품의 이름으로 표기될 수 없다. 또한 방송이나 인쇄물까지 이러한 광고 홍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접근이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담배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판매 당시 적정연령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공지에 대한 문구는 법정되어 그 크기는 너비 20-30cm, 전체 표면이 600cm<sup>2</sup>를 차지해야 하며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를 사용하고 읽기 쉬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세워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 나. 최근 제정 혹은 개정된 담배관련 주 법률

Newfoundland와 Labrador는 Smoke-free Environment Act를 2002에 제정하여 음식점과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접근이 허용된 곳에서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Saskatchewan은 The Tobacco Act를 2002에 제정함으로써 담배 판매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시작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담배광고에 노출되는 것로부터 보호하고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접근이 허용되는 소매상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거나 판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ritish Columbia는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을 2002년에 개정하여 흡연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흡연을 허용하는 호텔과 도박장은 반드시 분리된 흡연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흡연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흡연실에 작업대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근무

상 흡연실에 간헐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흡연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흡연실은 반드시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도록 하며 흡연실 전용면적의 45%와 도박장 전용면적의 65%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흡연실의 공기는 직접적으로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며 규정에 맞는 장비에 의해 정화되도록 하고 있다(Health Canada, 2003c).

## 다. 담배규제 프로그램

캐나다의 경우 관련 법규를 통한 흡연규제 이외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담배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ederal Tobacco Control Strategy(FTCS)가 1999년부터 추진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담배규제 프로그램으로 시행 첫 5년간 560만 불 이상을 담배규제에 투자하였다. 담배규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상호연계적·지속적인 운동이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FTCS의 주요 다섯 가지 목표는 첫째, 흡연율을 프로그램 시행 첫째의 25%에서 20%로 감소 둘째, 담배판매량 30% 감소 셋째,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법을 준수하는 소매상을 69%에서 80%로 증가 넷째,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을 감소 다섯째, 건강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담배제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Health Canada, 2003d).

FTCS는 5개 기관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중 청소년을 위한 업무는 Office of Prevention, Cessation, and Education에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들의 담배시작 행위, 직접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조직에게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인 담배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FTCS는 이외에도 6개의 지역 사무소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6개의 지역사무소는 담배규제의 준수,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금지, 담배광고·판촉·후원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고 흡연예방, 금연, 교육 등을 위해 각 지역이 모은 자금을 관리하며 담배규

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비롯한 각 주·지방정부와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Nova Scotia의 담배 규제전략은 담배규제입법과 정책수립, 금연과 흡연자 치료, 지역사회운동, 청소년 흡연예방, 대중매체와 일반대중의 인식제고, 감독과 평가, 담배세 부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Manitoba는 청소년 흡연 예방에 중점을 둔 다년간의 담배규제전략을 2002년에 수립하였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담배규제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Non-Smoker Health Protection Law를 개정함으로써 소매상에서의 담배제품의 진열, 광고, 판촉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야기된 질병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담배사업자에 대한 소송을 시도하고 있다. Northwest Territories는 담배규제를 위해 보건사회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 간의 공동노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학교의 보건교육시간을 통해 담배관련 정보 보급, 지역사회에서 금연상담실 운영, 흡연자를 위한 니코틴 대체물질 치료에 대한 자금 보조를 들 수 있다. Alberta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부처 간의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2002년 포괄적인 담배규제전략을 수립하였다. 11.7만 불을 담배규제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8.7만 불을 교육과 금연운동에 할당할 계획이다. Quebec은 2001~2005년 동안 연간 5만 불~15만 불을 담배규제정책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적으로 3만 불을 담배밀매에 대한 감독과 통제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Health Canada, 2003e).

### 3. 호주

#### 가. 담배규제법

호주에서는 담배 규제법을 두어 금연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담배규제법과 기타 관련 법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의 포장과 관련하여 담배 포장

지에 건강경고문과 담배 내용물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담배 포장지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타르, 니코틴에 대한 함량에 대한 기준이 있다. 담배의 포장개수를 20개로 규정하고 있고 담배의 포장은 Tobacco(Cigarette Packaging Labels) Regulations,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tandards)(Tobacco) Regulations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경고문구와 사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고 문구는 40cm<sup>2</sup>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또한 브랜드별, 담배성분, 담배구성량, 흡연 시 끼치는 영향을 경고 문구에 넣고, 담배 제품을 전시할 때나 구매할 경우 이 경고문구의 정보가 읽기 쉽게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앞, 뒷면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가장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와 관련하여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거나, 미성년자를 위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하며, 만약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관리자까지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자동판매기는 공공장소에 둘 수 없으며, 자동판매기가 허가된 지역인 바나 카지노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에 대한 규제는 버스, 비행기에서는 완전금연, 정부건물에서는 제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카지노, 대중교통시설, 식당, 쇼핑센터 등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구역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연표시를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Transport Act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버스, 기차 및 전차를 포함한 교통수단 자체 뿐 아니라 정류장까지 포함하며, 금연표시도 게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담배와 관련된 글, 그림, 표지판, 시각적 이미지 등에 관한 광고 및 홍보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담배브랜드의 부분이나 전체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 담배제품과 관련된 디자인의 부분이나 전체, 담배제품을 상기시키는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 나. 금연전략

호주정부는 1991년 호주의 담배 정책(NATIONAL HEALTH POLICY ON TOBACCO)을 수립하여, 담배 규제에 관한 포괄적 접근에 대한 책임을 최초로 정식화하였으며 담배규제 계획을 매우 활발히 시행해왔다. 호주의 담배규제정책은 모든 형태의 담배에 관한 노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모든 호주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교차적 접근 그리고 국가적인 협조노력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형태의 담배에 대한 노출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모든 호주인의 건강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목표를 두었다. 첫째,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첫 흡연 예방 둘째, 담배 제품 사용자 수의 감소 셋째, 담배 제품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된 사람들의 수 감소 넷째, 담배 연기의 노출로부터 감소이다.

관련된 여섯 가지의 실행전략은 지역사회 강화(Strengthening community action), 금연 촉진(Promoting cessation of tobacco use), 담배의 입수가능성과 공급 감소(Reducing availability and supply of tobacco), 담배 판촉 행위 감소(Reducing tobacco promotion), 담배의 규제(Regulating tobacco) 및 간접흡연 감소(Reducing exposure to environmental tobacco smoke)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전략은 총체적인 연합접근 전략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각각의 중점 전략 분야는 달성되었을 경우 전략의 총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을 줄 명시된 목적이 있다. 더불어 각각의 중점 전략 분야 내에는 중점 전략 분야의 목적을 기술하기 위한 세부적으로 명시된 실행전략이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실행전략은 이들 전략을 실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따른 의도된 결과에 의해 추천되고 수반되었다.

## 다. 기타

호주에서는 법률규제 이외에도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에서 금연을 비롯한 건

강증진 사업을 실시한다. 이러한 기금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것이 빅토리아 건강증진기금(Th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Vic Health)으로 1987년에 조성되었다. 「빅토리아 건강증진기금」은 빅토리아 지역사회 내에 건강증진과 질병, 사고, 장애예방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였다. 「빅토리아 건강증진기금」설치 이후 1988년 6월에는 「남호주재단(Foundation SA)」, 1989년에는 「호주 수도권 건강증진기금(Australian Capital Territory Health Promotion Fund)」, 1991년 1월에는 「서호주 헬스웨이(Healthway in Western Australian)」 등이 뒤따라 설치되었다.

## 참고문헌

1. 2008년 아동청소년 흡연문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보고서, 이복근 외
2.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강민지. 2010
3. 보건복지부. 2008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008.
4. David Simpson 저, Doctor and Tobacco: Medicine's big challenge. 김대현 역. 담배와 건강: 의료인을 위한 지침서,
5. 대한가정의학회편. 한국인의 건강증진, 금연 307-334, 계축문화사, 2004.
6.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연구, 김승권외 ,2009
7. UN 아동권리협약
8. 청소년보호법
9. 청소년흡연을 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8
10. 지역사회연계성을 가진 청소년 약물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분야별 발제  
(발달권)

이 준 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국장)



## 사회자본으로서의 아동 참여 (아동총회를 중심으로)

김 옥 순 (수원대 교수, 대한민국아동총회 TF팀장)

### 여는 글

혹자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는 인권의 시기라 명명한다. 이는 2001년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전개된 때문일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정의할 때, 이제 한국사회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인간 본연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또 다른 한편에서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듯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사건들의 증가는 물론 더해 가는 범죄의 참혹성은 과연 한국 사회에 인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범죄의 증가가 자칫 성인들로 하여금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강조하도록 하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이 지닌 다양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은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이 강조된 나머지 그들이 지닌 인간 본연의 자유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도 된다는 당위성이 그동안 이 사회에 상당히 지배적인 사고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

한 네 가지의 아동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에서 앞으로도 상당부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아동의 참여권에 국한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현 시각과 아동의 참여권이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아동총회가 지니는 가능성 등을 정리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추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 학교교육은 우리의 아동관을 어떻게 형성시켰는가?

교육이란 반드시 학교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은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 교육과 사회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행동 전체를 일컫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학교교육으로 등식화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는 학교교육이 인간 교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산업사회의 시작을 1800년대 말엽으로 볼 때 학교교육에서 일어난 배움이 인간의 의식을 형성한 세월도 200년을 넘고 있다. 200년의 세월동안 학교교육은 인간의 의식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작 학교에서는 시험문항의 정답을 맞추는 배움이 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닌 자는 교육받은 자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자는 교육 받지 못한 자로 여겨진다. 교육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은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 학교교육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게 된 사고 중의 하나로 언급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과연 우리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면서 교육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인간이란 과연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적 접근이 시도되지 않은 채 교육이란 인간에게 많은 지식을 저장하는 행위로 인식토록 만든 것이 학교교육이 가져온 현상이다. 따라서 더 많은 지식을 저장하기 위해 아동에게는 효율적인 통제를 통한 기억훈련

이 교육의 최상 목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아동의 권리를 언급해야 하는 글에서 교육과 학교교육을 언급하는 이유는 산업 사회에 접어들면서 형성된 학교교육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동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하게 기여하였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아동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강조된 학교에서의 복종과 순종이라는 가치관은 교육에 임하는 개인들에게 인간이란 어려서부터 복종과 순종을 근거로 통제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런 의식은 또 다시 강화된 복종과 순종의 틀 속에서 아동 교육이 일어나게 하는 순환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의 의식에 존재하는 아동관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복종과 순종을 필요로 하는 아동관에 대해 충격적일 만큼 반대의 목소리를 낸 교육자가 Neill((2001)이라 할 수 있다. 니일은 모든 교육에서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힘에 대한 어른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본다. 그는 어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이들을 복종하게 할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순종이란 개인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강요되어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엄격한 훈육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정의 엄격한 훈육은 부모의 자기 증오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에서 완전을 위해 노력해 오다 비참하게도 거기에 도달하는데 실패한 어른들이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즐거움을 악마로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현명하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증오에는 증오로 응답한다.

Neill의 이와 같은 아동관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동은 엄격한 훈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는 아동관은 인간 그 자체를 악한 존재로 보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자신은 성선설을 신봉하지만 아동은 어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아동의 순종과 복

중을 강조한 산업사회의 학급경영 시스템에 인간의 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매몰된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Neill이 서양에서 선한 존재로서의 아동관을 강조한 학자라 한다면 왕양명은 동양에서 아동의 자유권을 인정한 대표적 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양명은 아동의 놀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하는 대신 아동의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아동을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김태오와 김병희(2005)는 왕양명의 이런 관점은 왕양명의 전습록에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대체로 어린이들의 감정은 놀기를 즐기고 구속을 싫어한다. 이것은 마치 초목이 처음 눈망울을 터뜨릴 때 펼쳐 주면 사방으로 뻗어가지만 꺾거나 휘어버리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린이를 교육할 때는 반드시 그 취향을 북돋아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스스로 뻗어나가는 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태오와 김병희는 이와 같은 왕양명의 교육관은 인간의 본성을 선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Neill의 사상과 매우 유사하며, 주자가 아동을 어른보다 지력이 못한 보호 대상으로 소극적인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아동교육은 엄격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왕양명의 양명학은 애석하게도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대신 고려 말기 한국으로 전파된 주자학은 20세기 까지 한국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회문화적 이념으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주자학적 아동관은 응축적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 학교교육의 팽창과 그로 말미암은 과밀학급의 탄생으로 인해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아동관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 2. 이 시대 아동관의 변화는 필연적인가?

정보통신기술혁명은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이라는 인류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인

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인류 사회의 문화유형을 postfigurative, cofigurative, prefigurative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그녀는 postfigurative 문화유형의 사회는 그 사회의 최고 연장자들이 그들이 체험한 문화를 연소한 계층에 전달하여 학습케 하는 사회이며, cofigurative 사회는 비교적 유사한 연령층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문화 전달이 이루어지는 사회, prefigurative 사회는 사회의 연소한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전달되는 사회로 설명한다. 그녀는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postfigurative 유형에서 prefigurative 유형으로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사회에서 젊은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영수, 1995).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는 마가렛 미드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각종 정보통신매체들을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아동들의 능력과 그들을 통해 활용방법과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나이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마가렛 미드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지식이라는 무기로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기성세대들은 권위의 무기로 쓸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사회라는 의미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의 양이 줄어들고 있음은 성인의 역할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필연성을 내포하게 된다.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 교육과학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이유를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며,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려는 교육적 노력으로,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학생과 교사가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학생들의 힘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지식정보사회로의 사회적 변환을 이해한다면 학교교육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이유는 장황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이종(1992)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한국사회가 봉착한 난관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 품질의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는데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지식정보사회의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발생을 추구하여야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반면 응축적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후발산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식의 사회경제적 활용이나 창조가 아주 낮은 산업사회단계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지식도입과 흡수/소화를 기초로 대량생산을 지향하던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도입된 최신 기계설비와 현장숙련 노동의 운영능력이 주된 부가가치의 원천이었으며 지식의 체계적인 활용이나 창조는 거의 주변적이었을 뿐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출발점으로 인하여, 지식의 체계적 활용과 지식창조를 기반으로 고도 산업화 즉 지식 산업화를 추구해 가야하는 지식화와 동시에 지식흐름과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범세계화한 정보화가 동시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발생을 위해 현 한국사회에 필요한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전략들을 구상해 왔다. 일예로 문화관련 분야에서는 사회구성원의 ‘문화력’ 향상이 그리고 교육관련 분야에서는 ‘창의력’의 향상이 대표적으로 구상된 전략이었다. 창조적 체험활동이란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과거 산업사회의 학교교육 형태로는 더 이상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가 배출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학생과 교사가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학생들의 힘으로’ 라는 문구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구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은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교사의 권위를 중심으로 학생의 복종



과 순종을 당연히 여긴 불평등한 관계였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사는 더 이상 학생 위에 군림하지 않는 학생과 협조하는 관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는 학생과 교사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세계일보, 10월 14일)는 사회 변화 속에 나타나는 교사들의 지나친 우려이다. 교사들의 우려는 상하의 관계에 익숙한 교사들에게 상하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의 신분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 또한 자신의 권리를 필연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사 권리가 학생과 교사의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진정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따라서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점을 능동적인 존재의 아동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의 권리 존중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진다. 아동의 권리존중이 아동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존중과 책임감 부여는 항상 함께 동반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동을 어린애로만 취급하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동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 Neill(2001)은 아동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일과 나이에 적절하게 되도록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아동들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동의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3. 아동의 참여는 사회 발전에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가?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정의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 12조 1항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와 2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한다)에 근거한다.

아동의 참여권이 지니는 중요성은 아동의 참여가 한 국가의 사회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의 결속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데 있다. 사회자본이란 Coleman(1988)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콜만은 물질 자본·인적 자본과의 마찬가지로 사회 자본은 신뢰를 통해 구축된 사회관계망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을 상호 협력하게 만들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간의 불신에서 발생한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이는 결과는 가져오기 때문에 한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됨을 역설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내의 결속감으로, 사회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참여행위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은 참여의 행위를 통해 아동에게 발생하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로 부터 기인한다. 아동의 참여는 아동으로 하여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감을 지니게 함은 물론 간접적으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니게 만든다. 실제로 Zimmerman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참여활동이 아동의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Cornad와 Hediman(1991)의 주장도 이와 유사하여 이들은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참여활동을

통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와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형성하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김희성(2004)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획득하고 사회성이 발달되며 독립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임파워먼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참여가 사회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 아동의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이 사회전반에 가져오는 순기능적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준상(2005)은 사회 자본은 사회구성원간의 접착, 매개, 소통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간의 정서적 느낌을 서로 통하게 만드는 네트워크이자 서로가 서로에게 심리적 믿음의 토대가 되게 만드는 의식소통의 매개체’라 설명하면서 사회자본이 지닌 소통의 기능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아동의 참여는 세대 간의 소통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통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한국사회가 지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는 세대 간의 심각한 단절 현상이다. 특히 스마트 폰, 이팍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심리적 괴리현상은 사회적 통합의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단지 심리적 괴리 현상만이 세대 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의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은 언어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길마저도 단절시키고 있다.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해)',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하면)'등과 같은 신조어의 탄생은 세대 간의 직접적인 언어소통 또한 방해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은 세대 간의 의식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의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

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아동의 사회참여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식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 4. 아동총회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2004년부터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제 7회에 접어든 아동총회를 매년 모니터링 한 결과 아동총회는 아동의 참여를 통해 사회 자원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공통의 의제를 채택하는 과정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지역은 물론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총회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자기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학습이 일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지역대회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지역과 삶에 관계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타인과 토론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타인과 조율하면서 아동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아동총회가 지니는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들은 아동들이 21세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딩스(2009)는 지역의 관점은 글로벌 관점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계시민 의식에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우를 존중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울 때 세계시민 의식에 대한 중

요한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지역적 관점은 글로벌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아동들은 지역대회를 통해 다른 아동들과 지역의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기초를 학습하고 있었으며, 더욱 더 나아가 세계적 관점을 갖게 되는 기초소양의 학습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아동들은 본 대회를 거치면서 지역에 국한되었던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회자본이 가지는 공동체적 이기주의라는 역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받고 있었다. 이런 점은 사회자본의 역기능의 제거라는 점을 넘어선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이 되는 활동으로 Berman(1997)은 세계시민 교육이란 세계시민적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총회는 아동들에게 참여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①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의제로 이끌어 내는 토론 과정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③ 자신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을 형성시키며, ④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대의 훌륭한 아동참여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

## 5. 닫는 글

Neill은 말한다. 많은 성인들이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동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아동에게 그 자신의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의 행복을 위한다며 아동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순종을 강요한다. 아동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은 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느낀다. 아동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성인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성인들에게 아동권리의 인정하라는 주문은 때론 너무 낮설어 성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는 시급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참여권은 다른 아동권리에 비해 앞으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글이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논란의 장의 마련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기본계획
- 김영수(1995), 발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고려원.
- 김태오, 김병희(2005), 왕양명의 아동교육관, 교육철학, Vol 27. 101-124.
- 김희성(2004),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딩스(2009).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넬 나딩스(편),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교육,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pp219-242), 학이당
- 서이종(1992), 지식정보사회로의 길 : 저항과 수용, 21세기 한국지식정보사회의 모색 심포지움 발표문
- 한준상(2005), '사회적 자본축적과 평생교육',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S. Neill(2001), 김은산 역, 행복한 학교 서머힐, 양서원.
- Berman, S.(1997). Children's social consciousnes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oleman, J.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95-120.
- Zimmerman M.A.(2000), Empowerment Theory. In Rappaport & E. Seidman(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Conrad, D.E., Hedin D.(1991) School based Community service: Phi Delta Kappan, 72, 743-749.





## 우리의 의견

박 태 은

(김포 금파중 1학년, 대한민국아동총회 6기 분과위원)

윤 혁 진

(서울 영도초등학교 4학년, 제7회 아동총회 참가)

지 해 나

(광주 유덕중학교 3학년, 아동총회 7기 의장)

성 무 현

(대구 영남고등학교 1학년, 아동총회 6기 의장)



## 소년소녀가장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세요

박 태 은 (김포 금파중 1학년, 대한민국아동총회 6기 분과위원)

**아동의 생존권이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 의하면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 우리 아동들의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양육이 가능하여 이러한 내용은 보장받는 아동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어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를 가리킨다. 이들은 1달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 504,344원 일 때, 정부보조금 422,180원 정도를 받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생계비 보조금만으로는 어려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 이들은 부족한 생활비로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섭취 등을 누릴 수 없어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녀가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살며 정부보조금을 받고 겨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집은 곰팡이가 슬어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보수를 하기위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녀도 다른 아동과 같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현재 사회의 복지 수

준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지원, 보금자리 주택 지원, 전세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무상급식 제공 등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이 정책이 모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기회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되어 많은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등의 기관에서 실제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더 많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자녀양육을 전혀 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녀를 맡기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절차 등을 몰라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꼼꼼히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 아동들이 자유롭게 미래를 꿈꿀 시간에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있거나,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은 같은 나라에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아동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 어린이의 보호권

윤 혁 진 (서울 영도초등학교 4학년, 제7회 아동총회 참가)

“어린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모든 어린이들의 소원입니다. 어린이들을 나쁜 것에서 보호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첫째, 우리들을 자동차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연합뉴스 10월1일 기사를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사망 9명·부상 366명)에서 2008년 517건(사망 5명·부상 559명)으로 늘어났고 2010년 상반기까지 338건(사망 3명·부상 357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갈 때, 학원에 갈 때, 친구네 집에 놀러갈 때, 우리들은 건널목을 건너게 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녹색어머니나 봉사단체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도와줍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나, 학원에 갈 때, 혼자 길을 갈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파란신호등에 운전해가는 차도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신호등에서는 손을 들고 지나가더라도 차들이 양보해주지 않고 빨리 지나가서 무섭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차나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서 마

음 놓고 놀 수도 없습니다.

1,2학년 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는데도 빨간불이 켜 있어도 건너가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니게 도와주세요.

첫째, 스쿨존이 있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는 CCTV를 달아서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둘째,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어른들이 교통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우산은 투명우산을 쓰게 해주세요.

넷째, 우리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도록 지도해주시고 자전거 탈 때 헬멧이나 안전용품 꼭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둘째, 우리들을 먹는 것에서 보호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인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구·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에 가면 색깔이 예쁘고 달콤하지만 건강에 나쁜 사탕이나 과자를 마음껏 사먹을 수 있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슬러시를 먹을 수 있고 열량이 높은 햄버거나 탄산음료수를 마음껏 사먹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 앞에 가게에서도 아이스크림이나 열량이 높은 과자를 마음대로 사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저처럼 아침밥을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오후에는 나쁜 음식을 사먹으면 우리들의 건강을 나빠지고 똥똥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불량한 음식에서 보호해주세요.

첫째,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와 음료수, 아이스크림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경고문구와 비만에 대한 경고문을 그림이나 글로 표시해주세요, 술이나 담배가 몸에

해로워서 경고문구가 붙어있듯이 어린이 식품에도 나쁜 성분이 있으면 경고문구를 붙여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먹도록 해주세요.

둘째, 건강에 좋지 않거나 불량식품은 부모님과 같이 가서 사도록 해주세요. 술이나 담배를 어린이들이 못 사먹듯이 불량식품도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해주세요.

셋째, 아침에 학교에서 간식을 주세요.

넷째, 학교 앞 그린푸드존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린이들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마음대로 사먹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 **세 번째는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세요.**

올해 학교에는 달라진 게 많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경찰아저씨가 서 계시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지킴이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에 수위실도 생겼고 4시가 되면 교문도 작은 문만 남기고 닫습니다. 학교가 안전하게 되었지만 학교에서 잘 놀지도 못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시간도 줄었습니다. 무서운 성폭행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환경사랑, 교통안전, 성교육, 경제교육, 나라사랑 등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어른들도 성폭행이 아이들에게 나쁘다는 것을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만들고 큰 죄를 내려도 어른들이 자꾸 하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마음대로 놀 수도 운동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교육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안 된다고 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각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제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지 해 나 (광주 유덕중학교 3학년, 아동총회 7기 의장)

1등은 한명밖에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1등을 목표로 도전을 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렇다. 1등은 정해져 있는데 수백만 명의 학생이 1등이라는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자유조차 없이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잠도 양보하고 하루 24시간을 공부에만 매달려 경쟁해야한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어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걱정이 된다. 정말 이러다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들어오시는 교과목 선생님들께서는 “반에서 7등 안에 들어도 xx대가기도 힘들다더라 이번에 인문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더 조급한 마음과 더불어 너무도 불안해지고 뭐라도 더 잡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책상에 더 앉아있게 된다. 그렇다고 놀고 싶거나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밀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대학이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니….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이 대학에 간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대학에 가는 것이 의무 교육은 아

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얼마 전 반에서 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손을 들어볼래?” 그러나, 손을 든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어린이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위계층만 이끌어 나가는 방식의 교육으로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해마다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도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은 47%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하게 된 일제고사로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시·도 간의 학교간의 석차가 나오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성적에 더욱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당연히 문제풀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눈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성적지상주의 교육으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고, 비행청소년이라는 나쁜 길로 까지 빠지게 된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음주 및 흡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더욱 심한 문제는 이같은 성적지상주의 교육이 심각한 경우는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으로 인해 대학순위에서 하위순위를 차지하는 대학을 다닐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또한 기술직을 낮게 평가하고, 판·검사, 의사, 공무원 등 이들 직업을 더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의 형성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꿈이 이런 분야로 치중되어가고 있다.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자동차는 만들어지지지도 못했을 것이었을텐데 말이다.

나는 아동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한 만큼 성적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마다 3시간 이상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치·환경·체험·진로·인성 등 돌아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체험프로그램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학교의 문제나 스트레스 등을 어른이 아닌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상담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좋은 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래상담을 통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역시 예방하는 것이다.

끝으로,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데에는 충분한 여가문화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 유해한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다.



## 아동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미래의 대한민국

성 무 현 (대구 영남고등학교 1학년, 아동총회 6기 의장)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모든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4가지 권리를 담아내고 있다. 그 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권리는 4대 권리 중 가장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참여권이다. 나는 우선 참여권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쓰기 전에 ‘권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며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가 찾아본 아동의 권리는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아동이 누리는 권리 또한 권리의 천부성과 보편성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한 천부성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하늘이 주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행위를 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아동들 또한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편성이란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아동이 연령적·정치적 제약과 경제적 무능과 같은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아동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임을 정당화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가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 개인의 생활과 관련하여 두발이나 의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자기 결정을 하거나, 집안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아동이 자기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이시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하여 아동의 권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도 아동권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대한민리아동총회에 열심히 활동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동의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서 잘 실천되어지고 있는 반면 참여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아동이 입양될 때 15세 미만의 아동은 의사표현권이 없고 부모가 이혼 할 때도 15세 미만 아동에게는 역시 의사표현권이 주여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아동의 참여권을 지나치게 경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堂堂하게 내세우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나누는 행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치활동을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교내 여론을 수렴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또 학생주도의 학교 행사를 늘리고 졸업식과 입학식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참여와 자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는 학교현실에서 교육은 지식이나 철학에서 모두 깊어질 것이고, 집단의 협력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새로운 시민사회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즉 학생참여 자체가 목적이며, 학생은 본래의 능동적인 참여활동, 바깥세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를 뛰어넘어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처럼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와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권리는 아동의 참여권에 실천과제일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적극적인 아동의 참여로 아동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사 내에는 학생자치기구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에서의 불편사항, 기숙사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 조치, 기숙사 간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을 학생 자치 기구에서 회의를 하여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숙사에 모든 학생들이 좀 더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고 있다. 우리들의 자치 기구에서 정한 규칙을 우리들 스스로 잘 지킬 것을 약속하고 건의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12, 13, 15, 17, 18조는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른들의 눈으로는 아동이 항상 미약하고 미완성적인 존재로 보여 지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가 잘 인정되지 않지만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가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의 마음과 의견을 들어주는 것, 아동을 참여시키고 아동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아동에게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전교 회장을 했지만 우리의 결정이 어른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내용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만이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의 아동총회에 참여하면서 능동적으로 아동권리를 위해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나 자신이 대견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 스스로 의견을 내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堂堂하게 내세우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의견을 나누는 행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의 이 경험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에는 아동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배려와 관심과 실천의지가 더욱 절실하다 하다고 생각한다.



## 발제에 따른 토론

윤 혜 미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장 화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 혜 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아동 생존권의 현주소, 어디인가?

윤 혜 미 (한국아동복지학회/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1959년 UN아동권리선언 이후 30년에 걸친 지속적인 관심과 정교화 작업 끝에 1989년 11월 20일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속에 제정된 UN아동권리협약은 지금부터 20여일 후면 꼭 만 21세가 된다. 193개국 (소말리아와 미국 제외) 이 조인한 UN 아동권리협약은 명실공히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존중하는 결정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추진력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UN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각국의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철학이며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도 1991년 이 법에 조인하여 1994년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4차에 걸친 보고서를 내는 동안 아동(복지)정책의 향해과정에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타수가 나침반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고 충실히 방향타를 조정하는가는 물론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

아동의 생존권은 CRC 제 6조에 기반한 생존보장원칙으로, 국가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걱정할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족과의 인위적 격리나 각종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출생 부터 생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존권은 보호권이나 발달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실제로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논의하기는 힘들다. 아동의 성장은 그 과정에서 생존, 발달과 보호 및 나아가서는 참여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아동생존권을 ‘아동의 생명유지권, 의료급여수급권을 포함해서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과 보건서비스를 누릴 권리’로 정리하고, 이를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개발한 신체적 생존권(빈곤, 질병, 영양, 신체충실도, 건강, 치료, 안전, 사고)과 질적 생존권(자살, 사회보장, 행복감)의 지표로, 그리고 OECD 보건지표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아동사망원인, 빈곤아동의 욕구, 성학대실태 등에 관한 단편적인 지표로도 접근하고 있다. 즉, 개념과 각기 다른 출처의 지표, 통계치, vignette, 및 주장과 같은 상이한 수준이 논의에 혼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신체적 생존권 지표보다는 질적 생존권에서 특히 자살관련 자료와 OECD 자료 및 동 연구원 자료의 행복지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자살이나 행복지수 등은 아동복지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포함된 각 요소들이 함께 상승작용하여 가져오는 결과라고도 생각되며, 아동 학대와 성학대 등의 주제는 보호권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보건관련지표와 자살예방 등의 지표 외에 아동 생존권의 구성개념으로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영역을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첨언하고자 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은 아동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아동의 기본권에서 생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보호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된다. 아동이란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 또는 대리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양육’이라는 개념에 의, 식, 주, 및 보건과 주관적 행복감을 종속시켜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만성적 빈곤은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있어, 그리고 아동의 욕구충족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빈곤은 아동발달의 잠재성의 뿌리를 뒤흔들어 빈곤의 가장 큰 희생자로 만든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이 지나 경제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당시 부모에게서 분리된 아동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경제의 회복은 총량적 회복일 뿐 빈곤아동의 비율은 그 이후 꾸준히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여 아동의 절대빈곤율이 8.9%에 이른다. 빈곤이 아동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특히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는 치명적이다. 빈곤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에 영향을 주고(영아사망, 저체중아, 미숙아, 기형아 등) 영유아기 성장과 질병, 아동기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토론자는 아동의 생존권에 박탈된 환경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수급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위의 논의를 도표화한 것이다.

쟁점	세부내용	현주소	개선점
부모와의 동거권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이혼 시 아동의견존중, 면접권, 가정위탁보호, 양육시설보호 등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가족 재결합 추진이 미약함	·아동의 부모 면접권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아동양육시설의 가족 재결합 서비스 지원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	아동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미비	출생 신고체계 개선 및 이혼 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화 및 추징체계 확보
부모로부터 지도 감독받을 권리	부모에게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받기	부모의 지도감독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추궁하기 어려움	부모의 지도 책임에 대한 법적 명시 필요
부모보호를 결한 경우 국가의 가정형 양육을 받을 권리	국가의 가정형 아동양육지원 시설 설치와 보호의 질 향상 의무	가정형 양육시설 전환 미비, 보호수준 개선이 미약함	아동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가정형 양육시설 지원강화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와 보호인력의 전문화

쟁점	세부내용	현주소	개선점
입양 시 아동이익 우선권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는 입양이 아니라 부모없는 아동에게 부모를 제공하는 입양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 무시되는 경향, 입양부모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충분한 입양대기부모가 부족함	·아동중심의 입양실무 강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헤이그 협약 조인
취업부모 아동의 사회적 양육지원 받을 권리	취업부모의 아동양육 지원 설치의무화	보육시설, 방과후 보호센터의 부족	특수보육시설 확대 방과후 지역사회보호 체계의 강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 후 교실 등)
사회보장권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빈곤아동 욕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 부족 ·서비스의 파편화	·빈곤아동 지원 강화 (자립지원금 증액, 발달지원계좌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microcredit, 부채경감 등 자활지원서비스 강화 ·사례관리강화 ·아동수당제 도입
건강보장권	산전건강검진 지원 유아사망을 감소 예방접종 지원 모유수유지도강화 고위험계층 영유아 양육지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정 증가 등에 따른 역학조사와 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 교육, 홍보가 요구됨	영유아양육지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아동기 정신건강 교육 홍보 필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가 아동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부모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빈곤아동의 박탈을 해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여건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2011년은 한국에서 구호사업 위주이긴 했으나 최초의 현대적 아동복지의 근간이 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지 50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성년기에 들어섰고,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장년기에 이른 한국의 아동복지가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 보장에 어느 만큼 와 있는지 분석과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UN총회에서 채택된지 올해로 21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아동권리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함께 여러 사업과 예방활동을 수행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들은 아이들을 권리의 주체라기 보다는 자신의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이 뭘 결정해’ 라는 식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권 침해의 최일선인 아동학대예방사업도 마찬가지고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학대위험 노출에 증가되고 있으며, 빈곤의 차별로 출발선상에서부터 불이익을 받는 아이가 있는 반면 날마다 성폭력의 피해아동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금 이 시기가 ‘아이들의 권리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아동권리옹호와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아동 안전망을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주제발제가 유해환경에 초점맞춰져 있기에 본 토론 원고에서는 아동보호권 전반에 따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동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아동보호권 옹호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법·조례 등 제도 개선, 아동보호권 옹호를 위한 전 국민 홍보 및 교육, 국가적 아동권리 기구의 필요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매뉴얼 개발,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토론을 하고자 한다.

## I. 효과적인 아동보호권 옹호사업을 위한 법·조례 등 제도 개선

효과적인 아동권리 옹호사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권리침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아동에게 보호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조례 등의 제도 개선이다. 최근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sup>1)</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의견이 분분한 하다는 것이다. 바른교육전국연합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sup>2)</sup>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의 학교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권 및 인권조례 관련 각종 연수 개최,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체벌 대체 방안 연구 용역, 조례해설서 제작 배포, 찾아가는 학생인권조례 설명회 등의 세부 추진사업 일정을 확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sup>3)</sup>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미비한 법조항으로 인해 아동보호권이 침해를 받은 사건은 다양하다. 최근 유부녀 여교사(35)와 중3 남자아동(15)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피해아동이 연령이 의제강간 성립기준인 13세 미만을 넘겼고 서로 좋아서 맺은 관계임을 진술하여 현행법상 법적인 처벌을 받을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학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격리 및 치료 등과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친권자의 친권행사 정지나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친권상실이 요구되는 극심한 사

1) [출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작성자 케이에스피뉴스

2) [출처] 뉴데일리/newdaily.co.kr

3) [출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작성자 케이에스피뉴스

건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의 상실은 청구되지도 않고 친권상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례는 최근 성폭력 몇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보호권이 보장되면서 아동이 양육되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 아동보호권 옹호를 위한 전 국민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아이들의 권리옹호에 대해서는 부처들마다, 자신이 처한 위치마다 의견은 분분하다. 아이들의 “결정과 선택”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더라도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며 보호받는 행위 자체가 아동권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최근 사건이다. 단순히 음란영상물을 보게 하는 것은 강제 성추행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나왔다. 50대 남자는 10세 남아를 유인하여 음란영상물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음란물을 접한 뒤 스스로 자리를 떠날 수 있었고, 음란영상물을 본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당사자 끼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50대 남자가 한 행동은 강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지만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9세의 여자 아이가 지나가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출처 : 수원지법 2009.9.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 항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sup>4)</sup>에서 밝혀졌듯이 유

---

4)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사한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법적 판정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치부하기는 할말을 많이지게 한다. 그러므로 아동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동 권리 등에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업무승진 등의 의무교육 제도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사건을 누가 담당했느냐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권리 인식 및 그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스스로에게도 아동권리교육이 유아/초/중/고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한다.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Save the Children 등 많은 단체에서 아동권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것 만큼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어릴적 부터의 권리교육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들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사회적 환경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는 역시 인식변화의 기본메시지이다. 왜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지,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 홍보에 대한 전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을 실현한다면 전국민 인식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국가적 아동권리 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대통령/총리 등 ‘위원회 천국’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다. 그러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이였다. 2005년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6월 아동복지법개정안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덧붙여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출처 : 수원지법 2009.9.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 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각공2009하,19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가 정식으로 출범되기 전 시범사업의 일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모니터링센터는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으며, 협약의 어떤 내용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가능하도록 아동권리 사업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UN에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임을 고백할 수 있다. 더욱이 아동권리 증진 및 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인 옴부즈퍼슨(10인), 그리고 옴부즈키즈(10인)는 아동권리협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긴 하나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프랑스의 옴부즈퍼슨에 비해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정부차원의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를 하루빨리 기대해 본다.

#### IV.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매뉴얼 개발

어떤 사업이든지 민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히 아동권리 그 중에서도 보호권은 정부의 관심이 없이는 학대와 폭력에 허덕이는 아이를 구출할 수 있는 “조치”와 “배치”라는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없다. 학대나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발견해서 조치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행정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경찰의 발빠른 출동, 동사무소나 시/도의 여러 행정조치,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One-Stop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전문적 진술확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친인척/시설/그룹홈 등의 아동특성에 맞는 배치, 그리고 피해아동에 맞는 전문가들의 서비스 및 행정지원 등 이루 해야 할 수 없다. 이런 사건들을 신속히 위기개입에서부터 사례 및 사후 관리까지를 한다는 것은 많은 난관을 부딪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간단한 한 예로는 학대받은 아동이 발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꼭 현장에 나가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신고접수된 아동과 행위자의 신분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기관이 ‘자료열람권이 있는 지정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행정책자인 “아동청소년 사업안내”에 기술해 두어도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며 몇몇 시도에는 담당자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민/민관 등의 MOU 체결뿐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업무들을 중심으로 ‘공동매뉴얼’을 기술하여 업무에 중복이나 누락, 협조, 역할분담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에는 아동학대관련 “Working Together”라는 업무지침이 있으며 이 지침은 아동학대 개입시 범부처의 역할을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 V.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

현황분석은 우리의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다. 이처럼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토대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분석은 정확한 통계취합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통계의 정확성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경우 성폭력과 관련된 국가보고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경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One-Stop 지원센터, 전국해바라기아동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통합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취합해야만 ‘우리나라 전체 성폭력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성폭력 데이터라는 대표성을 담보하려면 어떤 기관들의 현황을 취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또 다른 의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과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아동이 동일인일 수 있고, 경찰의 조사대상아동이 동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중복대상에 대한 의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성폭력 데이터가 허수 없이 정확하게 가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을 만들어내서 복지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부처간의 통계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분석해 볼 때 국가차원의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20여년전 우리는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의 모습이 너무 더디가고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직은 천천히 가지만 언젠가는 ‘가속도’가 붙고 ‘시너지’에 힘입어 아이들의 보호권 옹호에 더 나은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싶다. 국민들 중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최선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권 기준과 국내 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중심으로 -

이 혜 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과 교육권

#### 1) 발달권과 교육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1989 ; 이하 CRC)은 아동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발달권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하고, 정규적·비정규적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으로 구분된다(Save the Children, 1999). 이를 통해 CRC 제28조와 제29조가 규정하는 교육권은 발달권의 기본권이자 핵심권리임을 알 수 있다.

UNICEF(2002)는 CRC가 규정하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당사국의 교육정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분석하면서, 특히 초중등교육기관에서 모든 아동에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물을 포함한 교재, 교복, 시설 등의 무상지원은 물론 학교출석의 권장과 중도탈락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 교육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기초하여 교육권은 초중등교육을 받을 기본권리로서 국가로부터 학교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의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정의된다.

- CRC 제28조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CRC 제29조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아동은 교육을 통해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 2) CRC 제28조와 제29조의 교육권 기준

교육권 보장의 국제사회 기준인 CRC(1989)가 규정하는 제28조와 제29조의 교육권 내용과, 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Hodgkin, R. & Newell, P, 2002)를 반영하여 교육정책의 분석틀을 구성하면 <표 1>과 같다(이혜원, 2010; 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은하·신순영·이경숙·최은미, 2010.).

<표 1> 교육정책 분석틀

1. 목표 (기본 방향)	①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② 이에 적합한 평가 지표가 책정되어 있는가? ③ 교육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는가?
2. 대상자 (접근성)	① 모든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가(수급대상의 무차별원칙)? ② 초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장되는가? ③ 진로교육 등 다양한 중고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는가? ④ 고등교육은 능력을 갖춘 모든 아동에게 접근가능한가?
3. 교육내용 (교육방법)	① CRC 제28조 보장의 필요성이 모든 국민에게 홍보되고 있는가? ② 출석의 권장과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출석의 권장과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는 개별아동의 욕구를 반영하는가? ④ 체벌은 모든 학교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가? ⑤ 체벌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⑥ 학교규칙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CRC의 원칙과 일치하는가? ⑦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 욕구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가?

4. 행정조직	① 각 부처별 상설 담당국과 기관의 업무가 분담되고 상호 연계되고 있는가? ② 정부는 아동 관련 NGO 등 민간단체를 재정지원하고 있는가? ③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교육권 보장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④ 모니터링체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가? ⑤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가 확보되어 있는가?
5. 인력	① 담당공무원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 관련 국제사회기준을 인식하고 있는가? ② CRC의 홍보를 위한 전문가교육훈련과 인식제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CRC 제28조와 제29조에 규정된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 대상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방법은 적합한가?
6. 법률체계	①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 관련 법률 규정과 정책은 CRC 등 국제사회기준과 일치하는가?
7. 재정체계	① 아동의 교육권 보장 위한 예산이 책정되고 필요한 자원이 분배되어 있는가? ② 예산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 질의 확보를 목표로 분배되어 있는가? ③ 초등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인가? ④ 초등교육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무상인가(교과서, 교복, 준비물 등 무상지원)? ⑤ 중고등교육은 무상인가? ⑥ 만약 중고등교육이 무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아동에게 중고등 교육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가?

## 2. 국내 이주아동교육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 1) 국내 이주아동교육정책의 과제<sup>5)</sup>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외국인주민 2세의 증가이다. 2009년 외국인

5) 이 절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은하·신순영·이경숙·최은미,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장에서 일부를 재구성하여 인용했음.

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년대비 53.9% 증가했고 총 외국인주민의 9.7%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10).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인 학령기 아동 43,649명의 59.6%인 26,015명만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40.4%인 17,634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주민 자녀 가운데, 결혼이민자 자녀는 24,7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8% 증가했으나, 이주노동자 자녀는 1,27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9.4% 감소했고, 초등학교 재학생이 834명(65.7%), 중학교 재학생이 307명(24.2%), 고등학교 재학생이 129명(10.2%)의 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09). 2009년 재학 중인 이주노동자 자녀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강화된 불법체류외국인단속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미국이나 일본, 소위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자국민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2009년 총 46개(영미계 20개, 화교 18개, 기타 민족계 8개)로 총 10,993명(내국인 1,429명, 외국인 9,564명)이 재학 중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소위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은 자녀를 한국인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인학교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외국인자녀들은 한국인학교에 겨우 입학했다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중도 탈락률이 높다(이재분 외, 2009).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8년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학교 밖 외국인주민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이주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해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류에 대신해 ‘거주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모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므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이 아직 많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기회 평등은 물론 교육 과정과 교육결과의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부가 불법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을 벌인 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8월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개정(2008)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중학교의 입학, 전학, 편입학에도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가위원회의 권고(2009)가 반영되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교사 등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충돌을 빚을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단속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법무부도 학생을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연합뉴스, 2010년 8월 17일자). 그러나 현실적 최종 결정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교장이 한다. 따라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벌칙규정이 마련되고,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은 매우 제한된다. 더구나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마저 불안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의 본국 학력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나 서류작성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통역서비스 또한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입학 전 한국어를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교육기관마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지원대책을 표방했고, 2007년에 이어 2008년 6월에도『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다문화가정아동의 학습발달과 역량개발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고교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대안학교인 다솜학교를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1곳(총 정원 200명, 학급당 30명씩 6개 학급)을 개설하여 2011년 4월에는 운영할 예정이고, 부산 유일의 다문화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를 학력 인정의 정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다문화아동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맞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 결과, 현행 정책은 대부분 결혼이민가정의 자녀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시키려는 특성을 지녔다(한승준, 2008 ; 정영근, 2009). 즉 이름만 ‘다문화’ 정책이고, 실질적으로는 ‘등록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한국의 언어, 사회규준, 생활방식을 배워 한국인처럼 생활하라는 동화지원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이기 때문에 주요 정책이 초등교육에 맞추어져 있어 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중학교 이상 상급학교 진학, 진로지도, 자립지원, 취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다. 또한 이들의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는 고무줄 통계로서 부처별, 기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이주아동정책은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외국인)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지원’과 ‘부모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권 기준에 기초한 국내 이주아동교육정책의 개선방안

### (1) 이주아동교육정책의 목표 전환(“이주아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단순지원에서 역량강화로 전환
- 동화에서 사회통합으로 전환(교육소외 · 불평등→교육평등)
- 모든 이주아동의 신체 · 심리 · 사회적 발달과 자립 지원(무차별, 보편성, 통합)

성, 지속성)

## (2) 이주아동교육정책의 대상자 확대

-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급자격 확대(비자유무별 차별 폐지)
- ‘지원과 단속의 이중잣대’가 이주아동의 불안(학습부진→이탈)에 미치는 영향력 최소화
-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에 대한 가족 단위의 통합적 지원
- 이주아동이 원하는 공교육의 입학권 보장(교장의 자유재량권 폐지, 교육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안의 실효성 강화, 공립학교교사/공무원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폐지)
- 상급학교 진학권 확대(무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보장 원칙)
- 모든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3) 이주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내용의 개발과 교육방법의 효과성 강화

- 교육과정(공교육 진입, 학교적응, 이탈 또는 상급학교진학)별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 교육형태(공교육, 대안교육/비공식교육, 탈학교)별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 이주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히 출신국가별 차이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방법
- 영유아기 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의 접근성과 초·중등교육기관과의 연계성 강화
- 연령별 발달단계의 차이와 특별한 이주경험을 고려한 교재와 교육과정(프로

그램)개발

- 위험요인(비자없음, 또래와 연령차이, 한국어능력제한, 외모차이)의 영향력 최소화 방안
- 보호요인(이중언어능력 · 모국정체성 · 2개국이상문화체험 등 다문화경험)의 영향력 강화
- 학교출석의 권장과 중도탈락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 교육조치의 제도화
- 이주아동의 차별(또래의 따돌림 피해)경험을 예방 · 해결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 학교의 교육이념과 규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원칙(특히 교육평등)을 준수토록 개정

#### (4) 이주아동의 교육담당 행정조직 간 네트워킹과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 교육과정(공교육 진입, 학교생활적응, 이탈 또는 상급학교진학/진로)별 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과부, 법무부 등) 간 역할분담과 연계협력(네트워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연계협력, 교육청과 학교 간 역할분담과 연계협력(다문화사업과 교육복지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공교육기간과 지역사회 비공식교육기관 간 역할분담과 연계협력, 관련 NGO 등 이주아동교육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의 이주아동의 발달 특성 분석 등 전문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와 이주아동교육 관련 정부조직, 민간조직(한아협 등) 간 네트워킹, 이주아동(이주민)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센터 등 소수자 권리옹호의 제도화
- 교육형태(공교육, 대안교육/비공식교육, 탈학교)별 담당행정조직과 인력의 역할과 지원
-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담당 행정조직과 전문인력의 역할과 지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관련 국내외기구와의 연계와 협력(네트워킹)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육권 보장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체계의 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의 연계)
-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지표)의 개발과 지속적 평가관리시스템 도입(모니터링체계, 특히 매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의 연계성과 객관성 강화)
- 담당공무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기준의 이해와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인권감수성교육, 다문화감수성교육 등 개발과 실시
- 아동권리협약의 홍보와 교육에 관한 전문가교육훈련(제28조 관련 교대 재학생, 교생, 교사, 교육행정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전문인력의 입문교육과 보수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사 보수교육의 전문성 강화(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체별금지정책과 학생인권조례운동과의 연계성 강화)

## (5)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교육기회·과정·결과의 평등)을 위한 법률체계의 실효성 강화

-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관련법 규정 간 일관성과 상호보완성 확보
- 이주아동의 교육과정·교육형태·학교급별 교육권보장의 장애요인(비자유무별 입학·편입학차별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체계의 실효성(통보의무의 폐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명문화 등) 강화
-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행 관련법에서의 교육수급권자의 자격기준 확대, 국가의 재정적 책임 규정, 이중언어교육 등 급여(교육내용)의 의무 규

정, 교육 소외된 이주아동의 권리구제 절차 규정, 벌칙 규정의 마련

- 최근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의 법제화와 연계성 확보와 네트워크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서비스 수급권 규정)
- 아동복지법의 개정(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서비스 수급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격, 무상급식지원대상자격, 희망스타트사업대상자격 등의 확대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의 대상자격 확대 규정

## (6)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

- 교육권 보장과 교육 질의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예산 분석과 필요 자원의 적정 배분
- 초·중학교 교육의 무상지원(특히 교과서, 교육설비, 교복, 준비물의 무상지원 포함)
-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보장(이주아동의 고등학교 교육지원의 정당성, 연령별 신체·심리·사회적 발달의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목표의 달성 강화)
- 위와 동일한 논리로 취학 전 이주아동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과정·교육형태·학교급별 교육권 보장의 장애요인(비자유무별 입학·편입학 차별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보호요인(이중언어 능력, 모국정체성, 2개국 이상 문화체험 등 다문화경험)을 최대화하여 아동과 부모의 역량 강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재정)의 정당성: 이주아동의 역량강화→이주가정의 통합→저출산(합계출산률 ‘1.15의 충격’)사회의 투자

## 아동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과제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문은 우리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가를 아동관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고찰과 다양한 경험연구 검토를 통해 설득력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7년째 개최하고 있는 아동총회가 의미있는 참여의 장이자 참여모델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능동적인 존재의 아동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의 권리 존중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 아동 참여는 사회자본으로서 특히 세대 간 소통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사회통합의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 참여를 신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발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동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토론자는 발표문에 나타난 아동 참여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사회에서 아동 참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sup>1)</sup>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우리사회에서

1) 김영지(2010).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어린이재단,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권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pp. 57-100.

아동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으며(46.3%, 중학생은 66.4%, 고등학생은 78.3%)’, ‘우리사회가 아동은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48.1%, 중학생은 70.1%, 고등학생은 83.0%)’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79.3%(중학생은 72.5%, 고등학생은 78.2%)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다’ 28.9%(중학생은 21.8%, 고등학생은 14.9%), ‘보장하고 있지 않다’ 24.5%(중학생은 38.8%, 고등학생은 51.9%), ‘잘 모르겠다’ 45.8%(중학생은 39.4%, 고등학생은 33.2%)로 나타나 참여권 보장 수준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과제〉

### ○ 아동과 청소년 참여정책 연계·협력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서로다른 부처에서 중첩되는 연령대(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9-24세)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만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아동 참여사업인 ‘아동총회’의 주력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초4~중3)이며, 청소년 참여사업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대부분 중, 고, 대학생 연령대가 참여하고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등 결국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참여권 신장이라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성과와 전략을 나누고 연계·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 ○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의 지원 확대와 내실화

위 2010년도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에 인지도는 20%대로 낮으며<sup>2)</sup>, 아동·청소년 정책에 아동·청소년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견도 10~30%대로

2) 정책 참여기구 인지도 : 전혀모름(초등 50.5%, 중 62.4%, 고 66.2%),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초등 24.7%, 중 22.5%, 고 20.9%) (이후 인용한 실태자료는 모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 연구 결과임.)

낮게 나타났다.<sup>3)</sup>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통한 참여는 명목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영향력 강화, 정책과정에서의 피드백 활성화, 시민교육과 참여훈련 강화, 참여 지도력(담당 지도자와 공무원 포함) 양성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소수 아동·청소년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대학입시를 위한 경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있으나 아동·청소년 참여 모델의 하나로 의미가 있는 만큼 참여권 신장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 연구·조사 및 평가를 통한 아동 참여정책사업 진단 및 개선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며 이들 기구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왔듯이 대표적인 아동참여 프로그램인 ‘아동총회’를 비롯하여 아동 참여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한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더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 아동·청소년 참여정책 영역 확장 및 과제 개발

현재 아동·청소년 참여정책과 참여증진을 위한 노력은 참여기구와 프로그램 운영사업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다. 새로운 참여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 방법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권고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한 ‘일반논평 제12호’는 참여정책 범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참여권 신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준다. 일반논평 제12호 주제의 워크숍과 세미나 등 논의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

3) 아동·청소년 정책에 아동·청소년 의견을 반영 : 그렇다 (초등 31.7%, 중 18.9%, 고 13.6%), 그렇지 않다 (초등 26.0%, 중 24.4%, 고 37.8%), 잘 모르겠다 (초등 42.3%, 중 56.7%, 고 48.5%)

### ○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아동·청소년 주도적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으로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마인드와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대상의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 중 ‘참여프로그램 공모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 등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아동·청소년 참여형 인권사업 개발 - 국제적 인권모니터링 과정 참여활동

인권감수성 함양과 참여역량 강화는 활동체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작성해 보고 국제적인 인권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참여훈련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제네바프로젝트(프로젝트명은 Get ready for Geneva로 출발, 현재는 Get ready for Change로 진행)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사전회의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한 사례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양한 국가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국제회의와 행사에 파견함으로써 글로벌리더십을 키워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정책 분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참여사업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꿈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아동총회 참가자 대상의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는 중요한 시도로서 오래도록 지속,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그 외에 아동·청소년 지도인력의 참여역량 개발 및 참여 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참여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인권 및 정책 정보자료의 적극적 제공과 홍보(예 : 학생인권조례 초등용 버전 제공,

참여권에 대한 유엔 일반논평 제12호의 아동 눈높이 자료 발간·배포),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활동 등이 필요하다(관련 예 : 인권위 ‘인권친화적 보도, 방송물 공모 및 추천사업’ 등).<sup>4)</sup>

"어른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참여의 기술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빨리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는지 봐주십시오." - 카이룰 야즈리, 17세.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말레이시아 대표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이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고,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선언문 2002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8세나 12세, 혹은 17세의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팀의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 헤이디 그란데, 17세.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노르웨이 대표

"진보를 향한 각 사회의 역량은 다른 모든 요소들 중 미래사회의 건설과 설계에 청소년들의 공헌과 책임을 얼마나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청소년들은 지적인 공헌과 지지형성 능력 뿐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그들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 유엔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

4) 대중매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역할 수행 (대중매체는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 : 그렇다 (초등 43.4%, 중 63.3%, 고 76.6%)





## 2010 아동포럼

---

발 행 \_ 2010년 10월

인 쇄 \_ 2010년 10월

발행처 \_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우) 150-8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60-4호

Tel. (02) 831-1930-1, 3 FAX. (02) 831-1932  
[www.KOCCONet.or.kr](http://www.KOCCONet.or.kr)

인쇄처 \_ 도서출판 **한학문화**

Tel. (02) 313-7593 FAX. (02) 393-3016

---

